

함께하는 공익활동·지속가능한 경기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CONTENTS

● 공익활동발전연구사업	07
1 사업개요	08
2 주요성과	08
3 주요활동내용	09
● 경기도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실시	11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발전연구를 위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FGI 조사	17
● 경기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21
● 참 조 자 료	23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발전연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FGI 조사 결과 보고서	25
• 경기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41
• 경기도 민관합동정책토론 결과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제안]	59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도 단위 및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실태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공익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마련
- 실태 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2월
- 사업예산 : 총 20,000천원
- 사업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및 공익활동 참여자
- 사업내용
 - 경기도(도 단위 및 31개 시·군) 공익활동 실태조사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설문 및 FGI 조사
 -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경기도 공익활동 발전방안 연구
 - 시민사회 수요와 요구에 근거한 협력 실행방안 모색
- 연구팀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박은호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장	
2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3	이영순	함께 가치연구소 연구원	
4	김 현	군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5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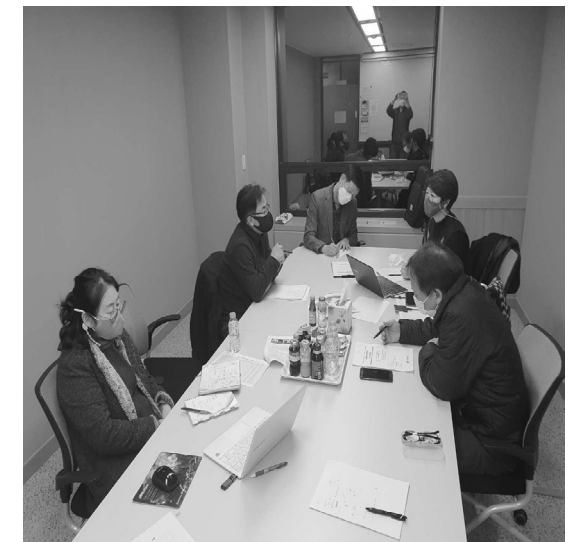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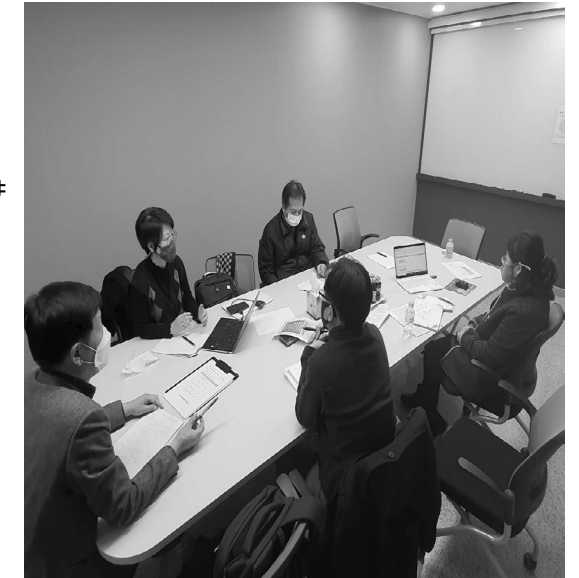
2 주요성과

- 경기도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실태조사 최초 시행(2,407개 단체)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대상 FGI 조사를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주요활동내용

1.연구팀 기획회의 (총 4회)

- 기 간 : 5/13, 6/2, 10/13, 11/9
- 장 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소회의실
- 내 용 : 31개시·군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방향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FGI 조사내용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실시

개요

- 설문취지 | 경기도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파악,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기 간 | 9월 ~ 10월
- 내 용 |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현황파악설문
- 설문 지역 및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2,407개 단체)

본 설문은 경기도 31개시군 시민사회단체(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조사(지역시민단체 현황파악)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연대체에서 함께 참여하여 경기도 지역 시민사회단체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와 활동가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내용>

- 설문 조사 내용

1. 단체명
2. 단체형태
① 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여부) ③ 임의 단체
3. 회원 수
① 등록 회원수 ②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수 ③ 상시적 활동 회원수
4.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총회 ② 이사회 ③ 운영위원회
5. 최근 3년간 주요 사업명 5가지 이내(위탁 사업, 자체 사업, 지원 사업 등)
6. 상근/반상근 활동가 수

<설문방법>

1. 단체(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수탁기관의 연구조사사업대상)에 전화 후 핸드폰 번호 받기
2. 핸드폰에 설문조사(구글폼) 전달, 그 외 지역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 가능
3. 받은 자료 정리 및 분석
※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불통률 체크 필요(불통/결번/무응답 등)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분석결과

본 조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자체연구로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기준으로 31개 시·군별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자체 수집된 데이터 2,407개 단체에 대한 현재 단체활동유무·주요활동영역·단체유형 및 의사결정 구조·상근자 유무 등 기본현황 (회원등록수, 상시적 활동회원수, 총활동가수)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전화설문과 방문조사 및 인터넷 설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자체수집데이터 1,091개중 최종분석에 사용된 총 단체 수는 792개 단체였으며, 기초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792개단체 중 31개 시군별 응답비율

<표1-1>시·군응답율

지역명	빈도(n)	유효(%)	지역명	빈도(n)	유효(%)
평택	18	2.3	용인	19	2.4
안양	18	2.3	연천	17	2.1
군포	37	4.7	양평	12	1.5
안성	22	2.8	동두천	8	1.0
의정부	31	3.9	가평	2	.3
수원	113	14.3	고양	48	6.1
안산	38	4.8	화성	25	3.2
성남	27	3.4	구리	29	3.7
광명	22	2.8	하남	50	6.3
시흥	24	3.0	포천	17	2.1
부천	38	4.8	남양주	28	3.5
의왕	18	2.3	여주	27	3.4
오산	21	2.7	과천	17	2.1
광주	14	1.8	이천	21	2.7
파주	9	1.1	양주	10	1.3
김포	12	1.5	합계	792	100.0

2) 비영리민간단체 운영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형태와 관련한 기초분석결과는 다음<<표2-1>>와 같다. 단체 운영형태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는 곳이 응답 단체 중 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비영리법인 형태가 20%로 조사되었다.

<표2-1>운영형태

운영형태	빈도(n)	유효 퍼센트(%)
비영리법인	162	20.5
비영리민간단체	553	70.0
임의단체	39	4.9
법인+단체	28	3.5
마을기업	8	1.0
합계	790	100.0

3) 비영리민간단체 주요활동영역

조사된 비영리단체 주요활동영역의 결과는 다음 <표3-1>과 같다. 총 792개 단체 중 주요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자원봉사’단체가 141개 단체(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관련 단체 83개단체(11%), 그리고 ‘문화, 예술복지’ 81개 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조사단체의 주요활동영역

번호	주요활동영역	빈도(n)	유효퍼센트(%)
1	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83	10.5
2	인권	8	1.0
3	평화, 통일	23	2.9
4	여성	34	4.3
5	권력감시	3	.4
6	정치,경제	16	2.0
7	교육,연구	71	9.0
8	문화, 예술, 체육	81	10.2
9	복지	30	3.8
10	아동, 청소년, 청년	63	8.0
11	소비자권리	9	1.1
12	가정	5	.6
13	노동	8	1.0
14	외국인	26	3.3
15	국제연대	1	.1
16	노인	16	2.0
17	장애인	77	9.7
18	자원봉사	141	17.8
19	지역, 주민참여	37	4.7
20	동물보호	8	1.0
21	농업, 먹거리	16	2.0
22	기타	36	4.5
합계		792	100.0

4) 비영리민간단체 의사결정구조(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수

총 응답 단체 중에 2개 이상의 의사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단체는 총 748개 단체 중 390개 단체가 전체 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의사 결정구조가 1개인 단체가 235개 단체로(31.4%)였으며, 의사 결정구조에서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단체는 123개 단체(16.4%)로 조사되었다. (*추가분석에서 기관별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유무 중복응답 조사에서는 총 792개 단체 중 총회의 의사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71.7%였고, 법인 및 비법인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58.6%로, 이사회의 구성율은 44.2%로 나타남)

<표4-1> 총 의사결정구조 수

	빈도(n)	유효 퍼센트(%)
1개 구조	235	31.4
2개 구조	390	52.1
3개 구조	123	16.4
합계	748	100.0

5) 비영리민간단체 상근자 유무

비영리단체 상근자 유무와 관련한 조사결과는 <표5-1>과 같다. 총 792개 단체 중 상근자가 있는 경우는 70%였으며 상근자가 없다고 응답한 단체도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1> 상근자 유무

상근자 유무	빈도(n)	유효 퍼센트(%)
있다	554	69.9
없다	238	30.1
합계	792	100.0

본 조사는 기존 경기도 내 전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초실태 조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진행한 조사로서의 의미는 분명하다. 다만 지역별 편차와 활동가들의 일정 체크 등의 사전 소통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해 정확한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조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해진 만큼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한 보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발전연구를 위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FGI 조사

개요

- 설문취지 | 경기도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파악,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기 간 | 9월 ~ 10월
- 내 용 |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현황파악설문
- 설문 지역 및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2,407개 단체)

이번 FGI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발전연구팀에서 경기도 내 8개 그룹을 모셔
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FGI는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서 존재하는 고충과 문제점을 찾
아내고, 지역의 시민사회활동,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
굴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시어 주신 의미 있는 의견은 제도개선과제,
정책방안 도입, 시민사회발전 공론화, 관련조례의 개정 요구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기
조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발전연구 FGI 질문

1. 귀하가 속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현황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지역 활동가의 경우 중복응답 배제)
2. 귀하가 속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 현황, 문제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연대활동 및 연대체 내부적 과제와 사회 환경 중심으로)
3. 귀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 재정, 사업 및 활동 지원방안)
4. 귀하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의 민관협치, 민관협력활동의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5. 귀하가 속한 지역에서 시민 및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지자체 지원을 평가한다면?
6. 정부는 올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기본계획에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보다 특화)
-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안양지역

- 일시 : 2020. 10.26.(월) 14:00
- 장소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참여단체 :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시장장애인인권센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2) 의정부지역

- 일시 : 2020. 10.26.(월) 15:00
- 장소 :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 참여단체 : 스무살이협동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아이쿱생협
의정부정의로운노동인권네트워크



3) 과천시지역

- 일시 : 2020. 10. 27 (화) 10:00
- 장소 : 과천시지역 내
- 참여단체 : 과천활동가네트워크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과천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 하남지역

- 일시 : 2020. 10. 27.(화) 17:00
- 장소 : 하남YWCA
- 참여단체 : 하남YWCA
하남YMCA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하남공정무역협의회



- 5) 김포지역
- 일시 : 2020. 10. 27.(화) 19시
 - 장소 : 김포경실련
 - 참여단체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회김포지회
김포경실련
새여울21

- 6) 안산지역
- 일시 : 2020. 11. 2.(월) 10:00
 - 장소 : 안산YWCA
 - 참여단체
안산YWCA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7) 광명지역
- 일시 : 2020. 11.2.(월) 14:00
 - 장소 : 광명YWCA
 - 참여단체: 광명YWCA
넓은세상작은도서관
광명YMCA
광명경실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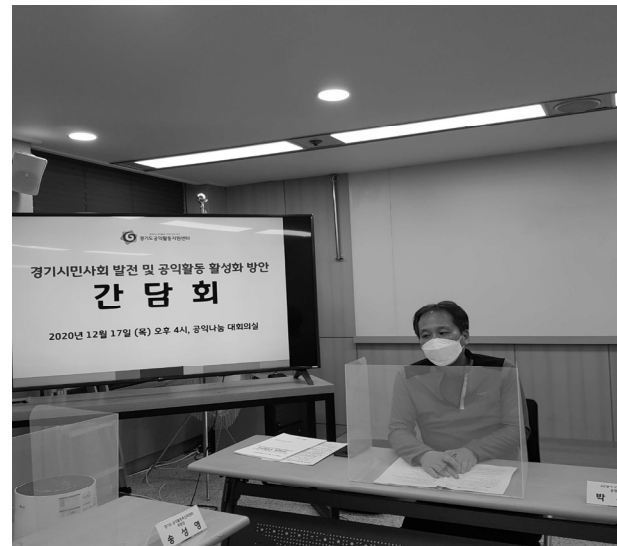
- 8) 포천 · 연천 지역
- 일시 : 2020. 11. 3.(화) 16:30
 - 장소 : 포천나눔의집돌봄센터
 - 참여단체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연천여성연대
포천나눔의집

경기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요

- 취 지 |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및 FGI 조사와 민관합동토론회 결과를 통해 정리된 실질적인 정책 제안 마련
- 일 시 | 2020. 12. 17 (목) 16:00
- 장 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
- 내 용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 연구,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 제안서 마련

참 조 자 료



■ 참여 (10인 이내)

- 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장 송성영
-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순영
-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분과장 박완기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유병욱
- 경기도협치지원관 정창욱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전연구팀 박은호, 이정아, 이영순, 김현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안명균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발전연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FGI 조사 결과 보고서
- 경기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 경기도 민관합동정책토론 결과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제안]

■ 순 서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제안 / 박은호 발전연구팀장
- 전체 참여자 자유 토론
- 활성화 방안 정책 발굴 및 제안



참조 1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발전연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FGI
결과보고서

2020년 11월

김 현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박은호 / 이영순 / 이정아 / 김 현 / 이정희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발전연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FGI 결과보고서

김 현(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

1. 배경 및 취지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도민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되었다. 설립 첫 해인 2020년은 센터 설립의 의의와 목적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행하면서 센터 활동을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말하자면 비영리민간단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화설문, 방문조사 및 인터넷 설문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2,407개 단체에 대한 현재 활동 유무, 주요 활동영역 및 기본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자체수집데이터 1,091개 중 최종분석에 사용된 총 단체 수는 792개다.

한편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서 존재하는 고충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역의 시민사회활동,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굴하고자 광역 단위로 8개 지역을 묶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화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 FGI는 설문조사와 함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발전연구팀에서 진행하였으며,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 FGI 조사 개괄

1) 조사내용

FGI 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개별 인터뷰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활동의 현황과 과제, 둘째 개별 인터뷰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 현황, 문제, 과제, 셋째 지역사회 민관 협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의식 그리고 넷째로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다섯째 지난 5월에 제정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흐름과 전망)과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그것이다.

FGI 대상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FGI 주요 질문 사항

1. 귀하가 속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현황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가 속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 현황, 문제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3. 귀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귀하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의 민관협치, 민관협력활동의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5. 귀하가 속한 지역에서 시민 및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지자체 지원을 평가한다면?
6. 정부는 올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기본계획에 몇 가지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참가자 현황 및 일정

FGI를 실시한 지역은 총 8개 그룹, 9개 지역이다. 의정부, 안양, 하남, 김포, 과천, 광명, 안산 그리고 포천과 연천 등으로 각 지역마다 3~5명이 참여했다. 경기북부 3곳, 경기남부 4곳, 경기 동부 1곳, 경기서부 1곳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1주일 정도 압축해서 진행했으며, 공익활동발전연구팀에 참여하고 있는 박은호(3개 지역), 이정아(2개 지역), 이영순(2개 지역), 김현(1개 지역) 위원들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30분~2시간 정도로 질문의 양이 적은 대신, 인터뷰이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보려 했다.

<표> FGI 일정과 참여자 등 개괄

지역	참가인원	인터뷰어	일정/장소
의정부	4인	이정아	10월 26일 /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안양	4인	박은호	10월 26일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하남	4인	박은호	10월 27일 / 하남YMCA
김포	4인	이정아	10월 27일 / 김포경실련
과천	5인	박은호	10월 27일 / 과천 개인주거지
광명	4인	이영순	11월 2일 / 광명경실련
안산	3인	이영순	11월 2일 / 안산YWCA
포천/연천	3인	김 현	11월 3일 /포천나눔의집돌봄센터

3. FGI 조사 결과

1)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 및 과제

지역마다 시민사회 조건은 매우 다르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구성, 정치지형의 변화, 농촌과 도시, 지역성향(보수성과 진보성), 시민사회단체 구성과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모두 상이했다. 포천, 연천과 같은 농촌 중심 지역은 보수성이 강하여 진보성을 띤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녹록치 않았으며, 하남이나 광명과 같은 신도시 중심의 시민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높았다. 안산이나 과천처럼 도시의 규모는 달라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전성기를 경험한 지역은 새로운 활성화 전략을 고민 중이며, 안양, 의정부, 김포 등도 지역사회 정치지형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현재의 활동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대·협력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자원도 적다.....시민단체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생기기보다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고, 기후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 당사자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있다.”(OO지역)

“OO지역이나 OO지역은 보수성이 지역적으로 강한 곳이라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기 성향을 분명히 하여 어떤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OO지역/OO지역)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벌어졌던 교육과 식생활 분야가 그 뼈대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다.”(OO지역)

“예전에 비해 시민사회단체 내에 더 많은 층위가 생겼다. 이전에는 시민단체 내 특정 세대와 그룹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새로운 다른 세대가 들어오고 있다.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존재가 OO지역 시민단체 내에 있다. 적절한 역량강화나 절차가 없는 편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온 것도 있고, 인적구성과 사회구성이 달라지는 것에 대처를 못했던 측면도 있다.”(OO지역)

“기존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꾸준한 활동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침의 과정 속에 새로 유입되는 신선한 피들이 수혈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매력적인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던져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OO지역)

“인원이 많지 않아도 작은 단체들이 모여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지자체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OO시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OO지역)

인력, 재정, 공간, 재생산 등 시민사회단체 상황은 대체로 열악하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은 언제나 재정력, 인력 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이 문제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과제이기도 한데, 사회가 분화되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비영리조직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97년 DJ정부 이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나, 법과 제도는 언제나 빠른 사회변화에 호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로 유입되는 재정과 인력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인터뷰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연대활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거나, 사람이 없어 이슈에 대응하지 못한다거나, 한 사람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꾸준히 현장에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인터뷰이들은 말한다.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임금이나 수입구조 때문이다. 소규모 각자도생하는 단위다보니, 젊은이들이 용감하게 활동을 시작해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현장의 이슈와 싸움하려면 붙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하다. 회원 확대는 건강에 무척 해롭다.”(OO지역)

“업무와 대응할 것은 많으나, 인원이 적어 돌파하기 쉽지 않다. 운영에 있어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회원 회비 80~90%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재정적 어려움은 모든 단체의 공통적인 어려움이다.....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건 전국적인 느낌이다.”(OO지역)

“같이 뭐 한번 해볼까 하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또 품을 내기도 힘들고. 그런 게 지금 현재 반복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OO지역)

“사무국이 없다는 것은 매우 취약한 점이다. 매년 돌아가면서 사무국을 맡다 보니 전문성의 부재와, 사무국을 맡은 단체의 역량에 따라 활동의 확대와 축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고, 상시적인 상근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OO지역)

“첫째는 시민 사회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활동가들에게 인건비가 주어져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회비로 인건비까지 충당하기에는 활동하기에도 바빠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OO지역)

“OO시의 한 인터뷰이는 아주 구체적으로 재정 상태를 설명했다. 그나마 중앙조직을 가지고 있는 엠프렐러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은 규모의 조직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OO지역)

“임대료만 82만원이다. 매월 회비에서 CMS 운영비용, 지역협의회 비용 등 7~8만원이 기본공제가 된다. 그것을 빼면 103~104만 원 정도 된다. 저희 단체 진성회원이 80명. 전기요금도 10~20만원, 그리고 행정업무 도와주는 간사님께 소정의 교통비 40만 원 정도 지급, 이것저것 제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다. 처음 보증금은 창립자 2명이 대주셨다. 나중에 돌려드려야 할 재정이다.”(OO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에 있어서 정치지형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당이 행정부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느냐가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아주 오래된 상수다. 시민사회단체에 우호적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도 관건이지만, 정파를 떠나서 행정부나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예컨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때 만들어졌던 3대 관변단체 특별 지원법에 의해 활동하는 관변단체가 지역 시민사회의 주축이라고 믿는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는다면, 90년대 이후 환경, 문화, 인권, 젠더, 풀뿌리 등의 다양한 NGO 활동은 주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농촌지역 혹은 도농복합지역에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받는 경향도 존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관변단체 색깔이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행정부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측면이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이를 테면 환경이나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중앙정부나 상위기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룰과 원칙이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시민사회가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너무 강하다. 기득권이 되었다. 의회 안에 다른 정당이 최소 1~2명 이었으나, 현재는 민주당이 전체 행정과 의회를 장악하다 보니 더 견제가 어렵다.”(OO지역)

“OO지역은 관변단체가 많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민단체 전수조사 시 보니 17개가 있는데, 거의 15개 정도가 관변단체이다..... 관변단체는 보조금을 쉽게 받고 활동한다. 모이라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관변단체가 체계적으로 잘 모인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국가(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잘 안 모이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다.”(OO지역)

“2014년과 2018년 두 번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정치세력화에 큰 기대를 가졌다가, 그 다음 선거에는 거둬들여지기도 했다. 지금은 소강상태거나 지쳐있거나 혹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다.”(OO지역)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으로도 많이 갔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싸우면서 시민단체 힘이 필요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많이 정치권으로 가면서 정치만 했던 분들이 시민단체를 경쟁자로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다.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보는 듯하다.”(OO지역)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코로나19가 인류를 기습한 지 1년여가 다 돼간다. 2020년 초, WHO가 전염병 대창궐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한 후,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오프에서 모이고 떠돌고 꿈꿔왔던 시민사회 개개인들이 이제는 흩어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소통과 회동의 방식이 짧은 시간에 변화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불편하지만 참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나와 내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중교

육, 강의, 캠페인 등 집합해야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혹은 대면 없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시민사회 활력이 주춤하는 형상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담론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고민이 크다.

“올해는 교육 사업을 발굴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OO시나 경기도에서 공간을 빌리면 저렴하고 넓어서 자주 빌려 사용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하나도 못 빌리다보니, 공간이 참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OO지역)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연대활동이 쉽지 않아 졌다.”(OO지역/OO지역)

“올해는 코로나로 여러 활동이 많이 정지 된 상태다.”(OO지역)

“코로나가 시대를 많이 변화시켰다. 언택트, 유튜브 등 영상 매체가 중요해졌다. 새로운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및 기술에 대해 사기업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는 자체적인 교육을 하기 힘들다 보니,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더욱 늘어났으면 한다.”(OO지역)

“OO지역 시민 대상으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대한 대중교육을 10회 정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기되고 또 연기되면서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게 됐다.”(OO지역)

2) 연대활동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와 지원방안

일상적인 연대활동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환경 이슈, 부동산 이슈, 개발 이슈 등 지역의 특별한 현안이 생기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라면 단체들의 연대는 수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이 없거나 사라지면 일상의 연대활동은 지속성이 떨어진다. 개별 단체의 업무가 연대활동 이외에도 과중한 상태고, 큰 단체 위주로 간사를 맡다보면 그 단체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재정난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모이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도 생겨난다. 그러다보니 선뜻 서로에게 연대를 요청하는 것을 자제하기도 한다. 서로 바쁘고 조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일상적인 연대체는 관성적인 활동이 이어지면서 연대체의 목적의식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동시에 여러 이슈가 터지는 지역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짐으로써 연대활동의 의미가 희석되기도 한다. 공간의 문제도 적지 않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면서 대화하고 수다 떨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아쉽다.

“연대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단체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를 하기 위한 활동가와 조직적 지원, 단체의 지원이 미흡하고, 그렇다보니 특정 단체의 업무나 활동이 과중된다. 그러다보면 특정 단체의 스피커가 커지고, 민주적 합의와 결의 구조는 약해진다.”(OO지역)

“연대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단체마다 인원이 적다 보니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 단체의 경우, 현재 참여하는 연대체가 많다.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OO지역)

“10년, 15년 전만 해도 목적의식이 자기와 맞으면 사명감으로 일을 했으나 점점 그런 활동가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보니 실무 활동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활동밖에는 안 된다. 예전에는 캠페인 행사에 40~50명이 참여해 주었는데 점점 힘들어진다. 단체가 있으나 지금은 명목상 단체만 남아 있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OO지역)

“예전에는 5층 아파트가 많아서, 1층에 내려와 평상과 놀이터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수제비 떠먹고 떠들고 차 마시고 하루 종일 놀면서 수다를 떨다보면, ‘아 우리 이거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이 연대활동의 시작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되니까 연대활동의 계기 자체의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누가 와도, 부담 없이 와서 밥 먹고 떠는 공간이 중요한 것 같다.”(OO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공간을 통해 연대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센터는 시민들의 활동 현장에 존재하므로 공유공간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군포에서 준비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 설계를 살펴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활용하는 공유공간은 물론이고, 공유사무함, 모임 공간, 다목적 홀 등 공간을 디테일하게 설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재정과 인력에 허덕이는 시민사회단체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연대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개별 조직이 부담하기보다 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저희 지역은 환경운동연합, 아이쿱생협, 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등이 사무실이 따로 있다.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있겠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별도의 공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부활동 등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활동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공유 오피스가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다.”(OO지역)

“여러 단체가 스피커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낭비 아닌가?”(OO지역)

“단체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과의제를 같이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OO지역)

“각자가 사무실을 확보한다면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처럼 한데 모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필요하다.”(OO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나누고 함께 쓰는 시대가 되었다. 개별 단체들의 능력 문제를 떠나, 독자적인 재정이나 공간 확보에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나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이 제정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불가피하다. 시민사회단체가 각자도생이라는 환경으

로부터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그러나 3개 관변단체 지원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는 한, 정부가 매우 다기한 시민사회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지원사업처럼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절차가 까다롭지 않게.

“연대를 하려면 단체들끼리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교류가 될 수 없다.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면 단체들을 서로 엮어주고 이해력을 도우면서 협력하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필요하다.”(OO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진행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행정 처리는 똑같다. 더 빠빠하다. 행정 처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게 없다.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열어주었으면 한다.”(OO지역)

“기초 단위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가 먼저 제안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시작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기도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초지자체로 매칭 형태로 내려 보내면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다.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너무 뚫기 힘들 것 같다.”(OO지역)

“OO시는 경기도의 매칭사업을 잘 한다. 예를 들면 만약 경기도에서 마을기획센터를 만든다면, OO 시도 바로 따라할 거다.....최소한 2021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5개 정도는 집중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었으면 한다.”(OO지역)

3) 민관협치 현황 그리고 개선해야 할 과제

여전히 시민사회는 행정부의 파트너가 아니다

거버넌스, 협치라는 개념은 꽤 오래되었지만,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은 여전히 더디다. 행정은 지시하고 시민은 따라야 하는 구시대의 마인드로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야 하는 관계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초기 시험무대다.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고 협의하는 협치의 기본 정신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기본 인식의 미비가 현재 협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OO시의 청년 이슈를 개발하고 싶었는데, 사업을 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그렇지 않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함께 한다는 느낌이 안 든다.....우리가 10급 공무원 같다고 한다. 우리를 10급 공무원 대하듯이 한다는 뜻이다. 주무관 아래 조직으로 생각하지, 협업 대상으로는 안보는 것 같다.”(OO지역)

“관은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기 귀찮고 힘들다고 파난되는 일을 민한테 떠넘기거나, 민을 부추겨 세워서 뒤에서 지원하거나, 동등한 입장에서 해본 적이 없다.”(OO지역)

“공무원의 시각은 우리를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는 자문위원 정도로 인식한다. 최근에 임용된 공무원들이 더 심한 것 같다.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것 같다. 예산을 손에 쥐고 공무원 갑질이 더욱 늘고 있다는 느낌이다. 민관협력 또는 협치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OO지역)

“행정은 자기네 영역을 민간단체가 왜 침해하느냐고 생각한다. 민간 시민단체와 뭔가 같이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우리 일에 왜 간섭하냐는 수준이다.”(OO지역/OO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는 늘 보조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의 관례대로 싸인을 하는 수준이라면 형식적인 참여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OO지역)

“협치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OO시 14개 행정복지센터와 청년복지센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이 모두 민간이다.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다. 대표 협의체는 일반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실무분과에는 일반 시설의 단체장들과 중간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OO지역)

협치가 대세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 시작이다

협치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지역사회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지역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직접적인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참여한 많은 후보자들은 ‘협치’를 통해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흐름은 오래됐고, 심지어 서울 등 몇몇 지역은 행정 시스템 안에 협치 모델을 적용하기도 했다. 나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도 있다. 협치가 대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서 서술했듯, 협치를 추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갭은 매우 크다. 개념에서부터 적용 사례까지 간극을 좁히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단계다.

“협치 부분에 있어 OO시는 제도나 조직은 이뤄졌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협치에 대한 인식 부족, 인력, 역량 등이 아직은 부족하다. 다행히도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실련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고 본다.”(OO지역)

“시대적 흐름이 있다 보니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민관협치가 굉장히 강조되었다. 실제 후보의 공약이기도 해서 시민사회와 협약식도 있었다. 민관협치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겉으로 보여 지는 시스템들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경향이 강하다.”(OO지역)

“우리 시는 타 지역이 먼저 추진하면 바로바로 벤치마킹해서 잘 만든다.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민관거버넌스로 만들도록 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다. 다만 구성은 했지만, 어딜 가

든 비슷한 얼굴들이고, 지방의원들도 겹친다.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OO지역)

“최근 지하철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다.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모집하고, 새로운 의견 수렴 등을 하면서 공무원과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형태로 시에서 민관협치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OO지역)

협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행정부도 시민사회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협치는 알아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소통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래서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그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역량일 수 있다. 기술과 역량을 갖춰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협치는 결국 사람이 한다. 개별 행위 당사자들의 역량이 모여 그 시민사회와 행정부의 역량으로 등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협치 기구를 구성하기에 앞서 다양한 교육과 직·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아니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공익활동가는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그 경험에 비춰본다면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공익활동가도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협력을 위한 준비나 민간과 같이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 부족하다고 본다. 인식과 교육이 끝없이 이루어져야 한다.”(OO지역)

“(협치 관련)위원회에서 저 혼자서만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위원들은 다 좋은 일 하자고 모인 분들이다 보니.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합리화 해 주는 조직으로 전략해 버렸다. 협치기구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협치 위원들과 싸울 일은 아니다.”(OO지역)

“민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민을 교육해야 한다. 민의 생각을 끌어내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는 공무원을 양성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민을 잘 대하고, 민의 마음을 읽고, 역량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관이 먼저 교육 받아야 한다. 관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OO지역)

“단체장이 누구로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일정하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OO지역)

4) 지자체의 지원 현황 그리고 평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공익활동 지원시스템은 없다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오고 있지만, 법제도가 강제하는 것 이외에 자체적인 전략을 세워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익활동의 주체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모델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 활동

가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선도적으로 설립한 지역이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익활동 지원시스템은) 없다고 본다. 민간 보조사업, 공모사업, 지원 사업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의 운영체제가 사업 중심으로 가 있다. 공익활동의 가장 큰 중심은 공익활동가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성장과 지원이 결국은 지역의 사회를 변화 시킨다고 보는데. 대부분 활동가를 위한 사업은 없다고 본다.....예전에 전설처럼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활동가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OO지역)

“OO시에서 청년활동가 지원을 했다. 이건 잘 한 것 같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청년 일자리로 16명. 사업이 끝났으나 행정이 연장을 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다. 2년 동안 청년을 지원해 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OO지역)

“OO지역과 OO지역은 거의 지원이 없다고 봐야한다.....경기도가 예산으로 압박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컨대 사무실과 상근자가 있다면 조직은 살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없는 조직은 오래 못 간다.”(OO지역/OO지역)

“저희는 조례에 의해 OO시에 있는 5개 단체와 함께 6년째 하천 수질 모니터링에 관련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 자체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단체라 같은 날, 같은 장소를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중복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체 간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예산 관련된 것에만 조금 신경 쓸 뿐, 유해식물 제거작업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피드백이 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자체에서는 예산 지원만 지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OO지역)

“제가 여기 2년 반 정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이다. 인건비가 문제인데, 비영리단체이다 보니 급여를 주거나, 예산을 주는 곳이 없다. 여기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인데, 지원이 골고루 분배되었으면 좋겠다.”(OO지역)

5) 구체적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방안

활동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가능성을 떠나 깊게 고민할 때다

문제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의 뒷받침이다. 공익활동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생업으로 생각하며 참여하는 이들도 많다. 활동가들의 처지가 다양하다면 일률적인 사업지원 외에도 다채로운 제도적 지원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인건비가 문제다. 기본소득이라는 담론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스며드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기적인 비빌언덕 없이는 공익활동을 포함한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자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일 수 있다. 물론 활동가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거나 활동가 인건비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

“예술인기본소득처럼, 시민사회 활동가도 최소한의 기본활동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익활동가의 범주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 시민의 영역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다. 지극히 개인이 알아서 했던 것을 국가가 공공 영역으로 설정한다면, 분명한 소득이 생겨야 한다.”(OO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자원규모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직접적으로 공익활동가에게,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운동이 생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OO지역)

“급여를 줄 수 없어서 고용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 실질적인 자원 마련에 있어 정책이 필요하다.....활동가 지원 부분에 있어서 활동가 기본 소득이 의제가 되었으면 한다. 고용 지원에 있어 신규 지원만 되다 보니, 시민사회는 신규보다는 지속 고용을 원한다.”(OO지역)

“사업비가 내려오면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저희는 사업을 죽도록 하는데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다.”(OO지역)

“시민사회 사무국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인건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최소한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재정이 기본이 되어야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사업은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더불어서 청년에는 예산을 많이 쏟아 붓지만 여성에게는 지원이 부족하다.....나중에 저희 활동가들도 기본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OO지역)

활동가에게도 교육, 쉼, 견학 등 역량강화·재충전 기회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간접적 지원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에 강구되어온 정책이고,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 가령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지원, 무조건 쉬게 하는 프로그램 지원, 육아·보육 등등 활동가들 몇 명 모아 놓고 자문을 구하면 매우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공익활동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그들에게 역량강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어느 순간 자원 활동이 많이 사라지면서 활동가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예전에는 활동가가 운동을 기획하고 움직이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전문가까지 요구되는 상황이다. 활동가들이 전문가까지 되어야 하냐고 했을 때의 고민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활동가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닌 쉼 프로그램, 현장 견학 등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뉴얼화 되어야 한다.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닌 1~2년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OO지역)

“공모사업을 할 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고, 나중에 회계처리 할 때 NPO 전담회계사를 지역별로 만든다거나 권역별로 만들든 해서,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단체가 진입하려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걸리기도 한다.”(OO지역)

“회계 관련하여 노무사, 세무사를 컨택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때문에, 공익활동 지원센터나 연대하는 곳에서 회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자문을 구할 곳이 필요하고, 어렵겠지만 시민 단체 활동가들에게 의료비 지원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OO지역)

“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시민단체 일을 하는 분들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다. 물론, 모두 봉사 정신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휴식 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OO지역)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시민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의 삶의 태도와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 문제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창궐을 무시할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5~7년 단위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인류를 위협했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언택트 시대에 걸 맞는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19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 하는 것이 꽤 있었다. 그 기준이 고용보험 5인 이상, 매출 얼마 이상이었다. 우리는 매출이 없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못 들어간다. 사회적경제에도 못 들어가고, 복지기관처럼 세제 혜택률이 높아 후원금을 받지도 못한다. 그렇다 보니 공익활동이 사각지대이다.”(OO지역)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 등 영상이 중요해졌다. 이런 시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생기고 발전하였으면 한다.”(OO지역)

“코로나 이후 공익활동에 대한 큰 담론도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을 매뉴얼화시켜서 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접목하였으면 한다. 민관협치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익활동에 지수가 높으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논의하였으면 한다. 시군에서 공익활동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 필요하다.”(OO지역/OO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어야 한다

행정의 지원금은 모두 세금이고, 용도는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불필요한 절차, 중복의 절차를 피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지원금이라면 인건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받는 민간단체를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 기부금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아졌고, 조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OO지역)

“민관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불필요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혁신학교 교육을 나가는데, 외부 강사가 들어갈 때 범죄조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소속된 강사들이라 신뢰를 가지고 간다. 하나하나 관에서 조서를 받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강사카드 하나만 보내면 뭍에도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OO지역)

“예를 들어 사업비 지원을 한다면 융통성 있게 제한을 두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행 불가능한 사업비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하다보면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변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런 변수가 생길 때마다 변경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다.”(OO지역)

“시에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전담부서 및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OO지역)

“기관장이나 센터장을 뽑을 때 전문자격 요건 외에 관련 분야에서 활동 경력에 대한 자격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오랜 경력의 활동가들이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OO지역)

4. 결론

설문조사 형식보다 FGI 방식이 활동가들의 생각과 고민을 깊게 살펴볼 수 있었다.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FGI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광역 차원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의 센터와 어떻게 달라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를 테면 광역 센터는 기초 단위에서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움직여야 하고,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군 단위에서의 공익활동이 실질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본연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 지원의 다양성 등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틀을 벗어나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깊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이런 접근은 시군구 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아직 센터설립이 미진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역이 센터 설립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풍부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참조 2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2020. 12. 17.(목) 16:00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대회의실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 취 지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등 민관합동정책토론회 이후 경기시민사회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최종 결과 도출이 필요하므로 집중적인 논의의 장 마련

□ 개 요

- 일시/장소 : '20. 12. 17.(목) 16:00 ~ 17:30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0인 이내
 - 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송성영 위원장
 -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최순영 부위원장, 박완기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 운영위원장
 - (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 정창욱 협치지원관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전연구팀 위원 4인
- 주요내용
 - 경기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제안

□ 시간계획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16:00~16:05	개 회	- 개회 및 인사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6:05~16:20	보 고	- 간담회 취지 및 주요 제안	발전연구팀 박은호위원장
16:20~17:25	토 론	- 참여자 전체토론	
17:25~17:30	폐 회	- 폐회 및 기념촬영	

□ 향후계획

-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세부계획 반영 및 제도개선 제안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관련 방안 제안 내용

□ 단위별 활성화 방안 제안 내용

- 윤종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주제발표
 -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이 확산되려면 → 상호 자원의 연계, 각 영역의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방식으로 문제에 어울리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음.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의 만남으로 해결방법 도출 필요
 - 민간이 사회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세심한 기획 필요 : 사회혁신활동(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시민사회발전 관련법.
 -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전국적 공동대응 필요
 - 입법전략의 면밀한 검토와 역할을 분담하여 국회대응,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정부에 대한 협력과 압박활동 진행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법, 공익위원회법, 기부금품법이 작동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팀 조사연구에 근거한 제안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조사결과에 근거한 제안
 -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기본관리의 부재 → 체계적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
 - 단체운영의 기본요건인 총회 구성 및 운영, 총회가 위임한 일상적 논의 및 의사 결정 기구, 지속적 단체 활동 여부 등은 존립 및 인정의 최소요건
 - 지역별 연대활동의 현주소 및 지역별 역량 판단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지역간담회를 통한 지원방안
 - 활동가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 시민사회 정보공유를 위한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 청년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및 지원 활성화
 - 민간단체 회계 및 행정 안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시민단체 활동 및 운영 관련 전문법률자문단 필요
 - 온라인 교육 운영 등 비대면 활동방안 지원 필요

3) 시민사회활동가 FGI를 통한 방안 제안

①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센터를 통한 시민사회 지원 필요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과 장비 제공
-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다각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기존 행정의 지원사업과 달리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 필요

②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방안

- 활동가 기본소득 필요 : 공론화를 시작하자.
- 활동가들의 교육, 심, 견학 등 재충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 언택트 시대 및 상황에 맞는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지원방안 모색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목적사업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건비 반영 추진 필요

4) 박은호 정책연구위원장 지원방안 제안

① 시민사회활동 인적자원 재생산을 위한 지원

: 청년, 시니어 활동가의 시민사회운동 직업 활동가로의 진입 지원

② 지역의 과제 대응단위인 시민사회 연대활동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

③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지원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불평등 해소 - 장기적 방안
- 비영리 공익단체의 모금에 대한 지자체 매칭 지원

④ 기초단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체계적 공익활동 지원 확대

3. 민관합동토론회 토론자 및 종합토론에서의 제안

1) 지정토론자 제안

- 기부금 모금활동을 시민사회 연대활동 단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비영리민간단체 조사를 전수조사 형태로 진전시키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상임소장)
- 경기도와 시·군의 민관협치 네트워크 형성 필요(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상임소장)
- 경기도의 시민사회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 후속작업 진행 필요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상임소장)
- 소통 및 의사통로의 명확함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색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함(한유경 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단체 기준인 회원 100명 이상 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하지
않는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경기도의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을 1년 단기지원이 아닌 본예산

지속사업으로 편성 필요(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경기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경기도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이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김강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서 민관협력이 가능하도록 단체
및 공익활동 데이터 허브 기능을 하였으면 함(김강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2) 전체 종합토론에서의 제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프로그램을 경기도가 개발하여 시·군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도록
제공해주었으면 함(참가자1)
- 지원 사업 중 일부 정책적 및 실효적 유의미한 사업은 단체의 선정지원 및
사후 평가하는 방식 채택 요청(참가자2)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속기록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16:00
- 장소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대회의실

□ 간담회 취지 및 주요 제안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올해 경기도에 있는 2,500개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조사한 내용과 경기도 내 9개 지역 시민사회활동가 FGI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민관합동정책토론회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로 가졌다.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제안들이 있었지만, 토론회 결과로 결론을 내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그 때 제기 된 여러 문제들과 지역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를 같이 얘기해 보는 자리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진행 되었던 이야기를 박은호 위원장께서 내용을 정리해 주셨다. 정리된 내용을 듣고, 이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관련 방안 제안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때는 법제화해야 될 과제, 광역과 기초를 나누어서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으로 이반해야 될 과제를 나누고 공익활동 관련된 주체들 중 특히 시민사회의 과제, 민관협력, 민관합동, 지역적 연대의 과제들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토론이 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분류하여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지난 11월 16일 민관합동정책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제발표와 제가 주제발표 했던 것이다. 제가 주제 발표한 내용은 공익활동발전연구팀의 조사 활동이라든지 FGI이라든지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어서 지정 토론과 플로어 토론에서 나온 내용과 제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거를 말씀드릴 것이다. 토론과정에서는 기존에 제안이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해야 할 점이라든지 부적절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추리고자 한다.
 - 단위별 활성화 방안 제안 내용으로 발표를 맡았던 윤종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주제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이 확산되려면 상호 자원의 연계, 각 영역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방식으로 문제에 어울리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문제의 만남을 통해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거시적 담론 첫 번째 제안이었다. 그 다음에 민간이 사회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세심한 기획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의 활동과 같은 내용의 총칭을 사회혁신활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시민사회발전 관련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국가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시·도 및 광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게 서울과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단위의 행정이라든지 시민사회의 동력을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나, 그 외 지역들은 힘 적으로 부딪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발맞춰갈 수 있도록 경기와 서울에서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입법전략과 관련해서 국회대응,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정부에 대한 협력과 압박활동 등 공동대응을 통해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법, 공익위원회법, 기부금품법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작동이 되도록 하자는 윤종화 위원장의 총론적 발제가 있었다. 그 원칙은 저희들이 이번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팀에서 조사 연구하여 제안했던 내용이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기본 관리가 정말 부재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차후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어야겠다. 단체운영의 기본요건인 총회 구성과 운영, 총회가 위임한 일상적 논의 및 의사결정기구, 지속적 단체 활동 여부 등은 그 단체의 존립과 활동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되겠다. 그것에 근거해서 기본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지역별 연대활동의 현재와 지역별 연대 활동에 대한 역량의 차이는 31개 시·군이 있기에 역량 판단에 따른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30개 정도의 시·군 지역간담회를 통해서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6가지이다. 활동가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시민사회 정보공유를 위한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청년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및 지원 활성화, 민간단체 회계 및 행정 안정화를 위한 교육지원, 시민단체 활동 및 운영 관련 전문법률자문단 필요, 코로나를 겪으며 온라인 교육 운영 등 비대면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좋겠다는 내용이 간담회에서 나온 중복적이며 공통된 내용이다.
- 시민사회활동가 FGI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센터를 통한 시민사회지원이 필요한데 센터가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과 장비 제공, 또 하나는 다각적 지원방안인데 공동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공모의 방식으로 주고 행정적으로 관리적으로 취급하고 문제점 찾아내는 방식이 아닌 형식과 절차를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지원사업의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을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모델링 해내자는 제안이다. 그 다음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간담회에서도 같지만, 활동가 기본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공론화를 시작하고 안착시키는 활동을 함께 진행하자. 활동가들의 교육, 쉼 등 재충전과 역량강화를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언택트 시대에 맞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 방안이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경험했던 시민사회 사람들이 불쾌하기도 하고 고충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등 일반 관리비, 이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회계로 따지면 판매관리비 등 목적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인력이 투입되면서 들어가는 인력비용 자체를 전혀 인정 안하다보니 인정하는 것을 주류로 만들기 위한 인건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 했던 것은 시민사회활동 인적자원 재생산을 위해서 청년이나 시민사회활동가들이 시민사회운동을 직업 활동가로 진입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개별단체 활동도 공익활동이지만 지역 내 시민사회가 지역 현안을 찾아내고 공동으

로 하는 연대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적극적 물적·인적 자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시민사회 활동이 직접적 지원 말고 일상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이라든지, 회비·모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장기적 방안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필요하다. 올해 경기도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30%이다. 근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어디에다 소비한 것도 아닌데 소득공제를 20% 밖에 안 하는 것이 불평등이니 세법 자체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불평등을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비영리단체 모금에 대해 지자체가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 민관합동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제안 중에 지정토론자 제안을 보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시민사회 연대활동 단위(기초, 광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상임소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조사에 있어 이번이 파일럿 상태의 조사였다면 전수조사로 전환 발전시키자고 했다. 그리고 민관협치와 관련해서 시·군 단위에서의 민관협치 흐름이 있는데 네트워크하여 협력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단위에 있어 경기도도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사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필두로 하여 구체적인 후속작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유경 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장은 행정과 시민사회 민간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통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으로 소통을 위한 통로를 정리하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주셨다. 이 내용은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 센터장은 20여년 전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영리 활동, 그 당시에는 공익활동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100명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하고 1년 후에 다시 2차 총회를 하는 이러한 방식 자체를 비영리민간단체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100명이라는 단위의 경직된 것이 아닌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경기도가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면 단발성 지원으로 시·군에 지원하고 시·군비 매칭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방안으로 본예산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 주셨다. 김강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경기도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고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실제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올해 제가 경기도 ODA 심사를 해보니 전국단위 조직들이 코이카에서 하는 ODA, 경기도 ODA, 서울시 ODA에 다 똑같은 그룹들이 지원한다. 근데 처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현지에 활동하는 법인, 인력구조가 있어야 ODA에 참여가 가능한데 그걸 말씀하신 것 같다. ODA사업에 경기도 시민사회가 진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자는 제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는 제안 인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데이터 허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얘기했던 아카이브와 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다.

- 전체 종합토론에서는 두 분의 제안이 있었다. 사람을 불러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닌, 회계프로그램을 비영리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개발하여서 시·군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단체의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참가자 제안은 공모 사업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우선 정책적이고 실효적인 유의미한 사업은 단체를 먼저 지정해서 지원하고 추후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나중에 평가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다.

- 이것으로 지난번 민관합동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다.

□ 참여자 전체토론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민관합동정책토론회 모든 내용이 자료로 남아 있으니 속기록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이다. 오늘 간담회 핵심 목표는 1년 동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파악한 부분을 내년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책 제안으로 다듬어서 전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현재의 임무이다. 제기 된 모든 것이 다 해결 되어야겠으나, 구분을 해 보자고 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법이 바뀌어야 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기본법이 바뀌지 않으면 100인 기준이 바뀌지 않을 텐데 이러한 것은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 바로 정책제안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니 가려내고, 그 조건에서 내년에 경기도 시민사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이런 정도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이런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것 또는 제도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 해 두시고, 우선 해결할 과제를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발제를 하셨던 윤종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이 발제를 했지만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규정에 근거한 시·도 조례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표준안 내용이 서울 조례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표준안을 내년 초에는 시·도에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 조례 표준안이라는 이름으로(가칭) 제안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 하였으면 합니다. 정책제안을 해야겠다고 하는 걸 제안해 주면 좋겠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그러면 첫 번째 사안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경기도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내년에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을 제안하고, 진행할 것인지 부터 논의를 하겠다. 거기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은 이후에 얘기하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진행할 건지 논의하여 그 제안을 보고서에 담아서 경기도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법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추는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조례에 첨가하고.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몇 가지 면밀히 봐야 할 건 협치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어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조례 개정하면서 경기도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또 만들어진다면 협치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이다.

- 송성영(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공익활동 촉진 조례가 있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새로 만들려는 그 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없애고 하나로 통합할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등 그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한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서울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해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더 집

어넣은 것이다.

- 정창욱(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 협치지원관) : 명칭이 정확하게 전부개정안이었나요?

- 송성영(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기존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개정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토론회나 이런 곳에서 얘기만 주고받아서 내용 등 연구해서 어느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안을 아웃라인 정해서 제안 했으면 좋겠다.

- 박완기(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주로 센터 운영에 대해 국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활동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전면 개정, 개정하는 형태로 갔으면 한다. 포괄적으로 시민사회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공동위원장 등 이런 형태를 크게 하나 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포함시킬지 별도로 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으나 방향은 시민사회 관련 조례를 서울 같은 방향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갔으면 한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오히려 여기에 연계를 굳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관협치위원회는 경기도하고 시민사회 활성화가 아닌 도정 내에서의 민관협치와 관련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

- (참석자 동의)

- 송성영(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협치위원회가 관하고 협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나 공익활동위원회와 다른 측면은 있으나 면밀히 따져보면 협치위원회에서 공익활동, 시민사회 활성화를 다루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행해지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시민사회 발전법으로 개정을 한다면 어떻게 연결을 해서 녹아내릴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물론 다르지만 그 지점이 있는 것 같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제가 설명 드리면서 하나 빠진 것이 있다. 조례를 대통령령이 바뀌었으니 바꾼다기보다는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올해 안에 만드는 걸 계획해서 용역 형태로 시민사회발전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하는 순간 시·도에서도 수립하라는 것이 있다.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만들어 지려면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

- 송성영(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어느 정도 의견이 조금 모아지면 아직은 형태를 짤 수 없겠으나 년 초에 공익활동 촉진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 하는데 공익활동촉진위원회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조례 개정 등 의견을 그 안에서 모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보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대통령령도 되어 있고 표준 조례안도 제안되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경기도로 보면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필요들이 있으므로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기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내용을 만들며 그 속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기에 일단 이렇게까지 제안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 송성영(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촉진위원회 분과에서도 문제를 다뤄서 의견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이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민관합동정책토론회 결과로 정책제안을 하는데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 박완기(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협치위원회에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협치 기본계획에 되어있는 사업 중에서 시민사회활성화하고만 연계를 어떻게 할지가 나올 것 같다. 협치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충돌 지점이 있을 것 같고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 경기도로 가서 담당하는 과가 같다 보니 양쪽 위원회에서 얘기하다보면 저희는 조절이 가능하겠으나 관에서 조절이 안 될 것이다. 협치위원회와의 연계는 시민사회활성화와 연계된 사업만 국한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리하겠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그리고 계속 얘기되었던 것이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다. 어떤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50명 청년활동가들을 공익활동일자리체험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확정되었다. 어제 예산이 다 확정되었다. 그거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시행처가 되어 진행을 할 것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계속 지원이 아니라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이 갖는 성격이 일회성이다. 내년에 한번 해보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없기에 지역에서 염두하고 계획들을 잡기가 불안할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의 사업은 있으나 나머지는 없는 것이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일자리 관점이나 일자리 행정에서 접근을 해 보면 지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24개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도·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다. 사실은 재작년부터 그거에 대한 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넓혔으나 기초지자체가 공고를 할 때에는 예산 감당이 안 되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고를 안 한다. 그게 현실이기에 거기에 청년일자리를 포함 또는 공익활동 청년 일자리를 포함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리면 된다. 그것과 똑같은 시스템에 도·시·비 매칭을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사회적경제 대상으로 징검다리 일자리 10개월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불량한 프로그램이다. 새로 만든다면 시민사회 활동, 공익활동에 진입하는 청년이나 시니어 활동가들의 일자리를 만들되 진행할 프로세스는 달라야 할 것이다. 그냥 사람 쓰겠다고 계획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공익활동을 하는 조직과 같이 협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2년짜리 활동 계획서를 같이 연구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다. 그 계획서에 대한 건강함과 양호함을 봐서 선정하

고 시민사회활동가를 재생산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는 정말 공익적 활동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기초에서 하는 건 연대활동인데, 연대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편차도 있기에 연대활동에 대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사업 예산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가져가면 한다.

- 이영순(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 : 장기적으로 청년 활동가 모집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한다. 연령은 어디까지인가요?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경기도 조례 상 35살까지가 청년이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청년일자리에서는 만39세까지이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각 기준이 다르나, 경기도 예산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걸 도의 구체적 요청 사항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청년을 무작위로 모아서 진행하는 방식은 안 하려고 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청년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단체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진행하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현재는 가안이나 이렇게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는 정책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청년이나 시니어 활동가들이 인건비 걱정으로부터 덜 수 있는 방식의 정책제안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제안 된 내용 중 공익활동가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저는 한 번 과감히 공론화 해보자는 제안이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여기저기 진행되는 일자리 사업들, 시니어 일자리 사업 중에는 한 달에 80만원 씩 3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도 가능한가 싶다. 이 사업은 50~52살 기준이 있다. 개별단체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중복적으로 여기저기서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이영순(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 : 이번 조사에서 비영리단체가 반드시 다 비영리단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러한 성격들이 드러났는데 그걸 구분하는 제안이나 기준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름만 비영리민간단체가 들어가서는 혜택의 수혜가 진짜 가야할 사람들에게 가지 못 할 수도 있으니 기준에 대한 것이 먼저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의견들이 지역간담회를 통한 것과 FGI 등 의견들에 있어 공동 의견들이 있다. 인건비 등 4가지 정도의 겹치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다 생각해서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운영위라든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정책제안은 관심 있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 박완기(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활동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해서 후기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영역을 구분해서 그 단체들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지원받는지와 그 나머지 공익활동에 대해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하자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접근하면 나름 제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이영순(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 : 비영리단체, 관련단체, 또 다른 경쟁 단

체가 생길거란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미리 구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박완기(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관련단체나 여러 법적 지원을 받는 곳하고의 영역을 구분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나 시·군 지원책을 활동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설득을 하면 좋겠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제안하는 건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사회의 청년·시니어 공익활동가 지원 방안, 아니면 청년·시니어를 빼고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과 시니어를 강조하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가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상을 확대해서 공익활동가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일회성 사업으로 제안되어 있는 공익활동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여 제안이 되면 어떨까요?

- (참석자 동의)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박완기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에 제안 했다가 예산 삭감이 되었던 것 중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1억 예산 사업비를 증액해서 5억이 되었는데, 1억 예산이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다. 1억을 다 쓸 이유는 없으나 실태조사와 함께 제기되었던 기본소득 등 연계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제안해 놓고 이런 정책이 제안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하게 될 연구 사업 속에 포함할 수 있는 주제일 것이다. 정리해서 제안하고 그걸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세 번째는 지역 네트워크이다. 지역의 시·군 공익활동지원 체계, 네트워크, 시스템 등 시·군에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제안들이 있었다. 아카이브, 네트워크 형성, 시·군 공익활동센터 설립과 운영 등이 있었다. 시·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이라는 큰 틀로 묶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틀을 그렇게 놓고 여기에서 제안 된 각각의 내용들을 강론으로 달면 될 것이다.

- 이영순(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 : 개인적 질문이 있는데 연대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지역별 연대 활동의 현주소 및 지역별 역량 판단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이다. 지역별로 이런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이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 근거는 시·군에 어떤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시·군별 협치 조례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총 11개 지역에서 제정되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공익활동 조례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에 연대 조직이 있는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같은 그룹이 있어서 활동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전체 비영리민간단체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나 시민협이 모이는 건 굉장히 적은 규모인 지역도 많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으니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3번째는 빼도 객관적인 1,2번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정책제안이니 말씀해 주신대로 시·군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큰 꼭지를 가지고 그걸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이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으나 10억으로는 31개 시·군이 도저히 지원 못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니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하나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은 시·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과 관련된 시·군별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박완기(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센터 시·군 설립 시 운영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경기도가 운영비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사회적경제센터도 일회성, 단발성이었다.

- 박완기(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안명균 센터장님이 100명 이상 회원 얘기했는데, 전수조사 들어가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리 등 거기에 대한 경기도 정책을 한 부분으로 넣었으면 한다. 경기도 전수조사를 하면 10년 동안 방치 되었던 경기도 비영리 관련한 관리, 등록 등 경기도의 제도적 정비 쪽을 하나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당시는 100명이 넘어야 했던 걸 요즘에는 시·군의 중간조직을 보면 심지어 5명이 모여서 학습모임을 해도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20년 전과 현재의 현실적 괴리가 크기에 그 내용들이 이후에 시민사회발전 기본조례에서 용어상이든 의미든 담기는 데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별개의 항목으로 하여 중복 된 우리 계획이라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닌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안해 놓겠다. 이걸 근거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민관합동정책토론회에 경기도 민관협치 담당 팀장이 가지고 온 자료 중에 경기도 공익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정리해 왔다. 그 예산이 새마을협의회까지 지원하는 예산까지 다 하여 2,600억이다. 그 중에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공모사업 형태로 하는 것이 딱 12억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예민하겠으나 제일 많은 곳이 굶직굶직하게 나가는 것이 복지 관련 센터, 자활 센터 같은 고정비 비슷하게 나가는 게 제일 많고,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받는 13개 법에 의해 지원받는 단체가 많다. 이러한 자

료를 팀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이걸 한 번 정리해 보라는 걸로 들렸다. 이걸 도리어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원체계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는 것 같다.

- 정창욱(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 협치지원관) :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조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2005년에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항되면서 예산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려왔다. 지방에 상당한 복지사업들이 지방재정, 보조금 사업으로 지출되는 거여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하러 가는 복지 재정 전문가를 붙이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될 것이다. 그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 경기도 민관협치 담당 팀장이 가져온 이유는 민간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2,600억 예산에 복지 예산은 반도 안 된다.

- 정창욱(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 협치지원관) : 경기도 재정공시에 다양한 보조 사업들, 민간경상, 사회복지 관련된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재정공시에 나온 자료이다. 전체 민간한테 행정을 대신해서 보조금 사업하는 사업이 열거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매년 8월에 공시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굳이 안 해도 그 내용에 총괄적인 내용이 다 지방재정공시에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만 봐도 재정은 현황 파악이 될 것이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그럼 현재 네 가지 정도로 제안이 정리되었다. 토론회 때 제기 되었던 내용 중 정리가 안 된 것은 무엇일까요?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하나는 기부금의 불공정 해소이고, 공익활동 모금에 대한 지자체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이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두 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으나 카테고리로는 묶는다면 하나 제안을 해 주세요.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시민사회 기부금 및 모금화 활성이 필요하다.

- 정창욱(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 협치지원관) : 그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실에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행정 담당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다. 이것은 민관협치 기본계획에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적었던 내용이다. 하나는 첫 번째 단계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인식 개선의 의미가 강한 게 현재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민주노총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 신뢰도를 많이 높여야 하는데 현재 활동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경기도의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단체 활동을 홍보 할 수 있는 내용을 경기도 인프라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린피스는 자체 비용으로 TV광고를 한다. 근데

주요 메이저 단체인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도 못하는 수준이기에 우리 사회 전체의 유익함을 주는 공익활동을 홍보하는 인프라를 갖춰준다면 기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활동이다. 먼저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활동의 긍정적인 부분을 대국민,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면 기부금 모금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내용이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용역 준 기본계획에도 홍보 관련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되어야 인식개선을 통한 기부금 활성화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불평등 문제는 행정이 수용하기에는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한 판단은 논의가 필요하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아젠다를 제기하고, 선차는 논의하면서 정하면 될 것이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지금 실행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안 되었던 것이 펀드 방식이 있었다. 이름을 붙인다면 ‘공익활동펀드’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100원을 내면 지자체가 100원을 내어 펀드가 조성되면 객관적으로 공익활동 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이 제안되어서 시범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 방안까지 다 포함하여 정리하면 되고, 시민사회 기부 및 모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해서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 플랫폼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겠죠. 기부금과 관련해서 제도적 불공정이 있으니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펀드 이런 것처럼 간략히 정리해서 제안하면 나름 정리가 될 것 같다.

- (참석자 동의)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단체가 행정적·재정적·투명성·합리성·효율성을 가지기 위한 시스템 지원이 있는 것인데, 회계나 행정, 기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묶어서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면 좋겠다. 특히 회계는 지역 간담회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그냥 교육은 실효성이 없기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화 된 회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영리공익단체 회계를 공시하는 양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할 때 한계점이 있으니 수정·보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단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세트 메뉴로 지원하면 한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단체 회계·행정·법률 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장) : 그리고 간담회 내용 중 온라인 교육, 교육 사업을 온라인으로 여는 것까지 제안이 되어 있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그러면 온라인 또는 언택트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법률 전문가 자문풀이 필요하다. 내년 잡은 사업 계획 중에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이 있는데, 시작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회계 교육 및 회계 프로그램

램 지원이 필요하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오늘 정리한 초안은 회람을 드리고 그 때 의견을 좀 더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토론회 결과를 6가지로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민관합동정책토론회의 결론으로 정리해서 맺고, 경기도에 전달되도록 진행을 하겠다. 외적인 얘기로 진행한 것 중에 이번에 센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파악한 것이 연대 기구가 있는 지역들이 14~15개 정도이다. 비 상시적이지만 연대 활동하는 지역이 20개 넘게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 보고회를 ZOOM으로 진행했더니 20개 지역에서 참여했다. 이것은 그 만큼 지역에서 관심이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지역순회 간담회를 할 텐데, 지역순회 간담회 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함께하는 것을 고민하고 참가하는 방안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겠다.

- 유병욱(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내년도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지역과 네트워크하지 않으면 붕 떠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해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 최순영(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부위원장) : 그것보다는 지역에서 우선 우뚝 서도록 정비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게 잘 정착되었을 시 경기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에서 잘 되어 있는 곳은 우선 몇 개라도 된다면 그곳이라도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한다. 엄격히 보면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라 하면 지역의 단체들이 경기도에 연대가 있는 것들의 또 연대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기에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를 어찌 가져갈 것인지를 따로 고민하였으면 한다.

- 송성영(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고민해 보고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좋은 내용인 것 같다. 오늘 간담회를 민관합동정책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정리했는데, 다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던 것 같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경기도 내에서 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닌 후속조치들이 앞으로 더 있었으면 한다. 요구할 것만 요구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진행되었으며 한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모두 고생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3

경기도 민관합동정책토론 결과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 민관합동정책토론 결과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제안

정 책 과 제
①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개정 ② 시·군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지원체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③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지속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④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공익법인 등 공익활동 단체 실태조사, 관련 제도개선 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⑥ 공익활동단체의 회계·행정·법률 온라인 활동 전문가 자문, 지원체계 마련

1. 정책과제 세부내용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개정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시·도에 제안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
-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필요
 ⇨ 2020년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예정
-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발전과 시민참여, 공익활동 지원 등 관련 조례의 중복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시·군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지원체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 2021년 본격화 될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사업 확대
 ⇨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사업은 31개시·군 중 5개 정도의 시·군센터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규예산 편성을 통해 31개 시·군 모두에 지원할 필요 있음
- 시·군 공익활동지원 사업의 통일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운영비의 일부 지원 필요
- 시·군 시민사회네트워크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필요
 ⇨ 경기도 시민사회 아카이브 구축 등 정보 축적과 교류사업 지원 필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지속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경기도 공익활동가 기본소득]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 청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공익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체험사업은 1회성 예산으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속성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사업과 공익활동가 일자리지원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 3년간 지속적 지원 가능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및 공익법인 등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경기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500여 단체의 운영과 사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필요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법,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과 단체 및 조직 간의 협력 방안 마련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자발성·지속성을 위한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필요
 - ⇒ 정치자금 후원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 됨, 시민사회단체 기부의 경우 10% 세액공제
- 경기도와 시·군의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 기반 마련 필요
 - ⇒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경기도 공익활동 컨퍼런스 등 개최 검토
- 가칭[시민공익활동펀드]등 시민참여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 정책 필요
 - ⇒ 일부 지자체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칭 방식의 후원기금 조성 등 검토 필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의 회계, 행정, 법률, 온라인 활동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지원체계 마련

- 회계교육과 자문, 공통 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회계 투명성을 위한 지원 필요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 자문단 등 분야별 자문네트워크 구성과 지원 활동 필요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